주간 통일정세

2015-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Ⅰ.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Ⅲ.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KINU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15-26(2015.06.29~07.0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우) 137-756
전화 (02) 2023-8000 전송 (02) 2023-8209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Ⅰ.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한, 치욕스런 대일 굴종행위 하고 있다" 비난(7/9, 연합뉴스)**

- 북한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이 9일 남한 당국이 최근 일본과의'관계 회복'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치욕스러운 대일 굴종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담화를 통해"일본과의'관계 회복'을 떠들며 비굴하게 놀아대고 있는 괴뢰 패당의 추악한 대일 굴종행위를 반민족적, 반인류적 범죄로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말함.
- 더하여 대변인은"우리 민족과 인류 앞에 저지른 일제의 천인공노할 죄악은 백년, 천년이 흐른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괴뢰패당이 대일 굴종행위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응원단 보내 도움줬는데…광주U대회 테러?"(7/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남한 군 당국이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북한의 테러나 도발 가능성이 있어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피해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라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얼빠진 자의 푼수 없는 넋두리'라는 제목의 글에서"그야말로 피해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 동족에 대한 모해에 이골이 난 미치광이의 추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더하여 이에 대해"남조선에서 국제체육경기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특색있는 경기응원과 다채로운 활동으로 경기대회를 보다 흥성거리게 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내외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함.

■ **북한 "남북관계 최악의 파국…도발 땐 즉시 대응타격"(7/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무덤길을 재촉하는 반공화국 대결망동'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지켜보며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 신문은 특히"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 강화 조치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며 불장난 소동의 도수를 날로 높여 북남관계는 파국에로 줄달음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의 위험은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함.

■ **북한 "남한 계속 도발하면 이희호 여사 방북 허사될 것"(7/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남측이 김정은 黨 제1비서를 모독하며 계속 도발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다음달 방북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보수언론을 비롯한 남조선의 불순세력들이 이희호 여사의 평양방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위협함.
- 대변인은 이어"괴뢰보수패당이 지금과 같이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심히 모독중상하며 도발을 계속 걸어온다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완전히 허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강조함.

■ **북한, 선원 전원 송환 요구…"안하면 단호한 대응조치"(7/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8일"강수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8일 판문점 적십자 연락 통로를 통해 김성주 남조선 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통지문을 내보냈다"고 밝혔음.
- 강수린 위원장은 통지문에서"우리 주민들을 전원 송환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귀측에서 그 무슨'유감'이요,'의사존중'이요 하면서 걸고 드는 것은 강제억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강 위원장은 이어"남측 당국이 지난 시기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쪽으로 표류한 우리 주민들에게 귀순을 집요하게 강요하였다"며"상투적 수법을 쓰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즉각 무조건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간부 망명설·처형설 부인…"새빨간 거짓말"(7/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논평을 통해"최근 남조선 보수언론들이 우리 군대의 부총참모장이'도주해 서울에 와있다'느니, 그 누구에 대한'처형이 있었다'느니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악담을 불어대면서'북 체제 불안정설'을 악랄하게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함.
- 중앙통신은"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하며"남조선 보수언론들이'탈북자'감투를 씌워놓은 그 장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마식령스키장을 우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이 넘쳐나는 곳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건설사업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군 간부 망명설, 명예훼손·인권모독" 재차 비난(7/10,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10일"이번 사태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납 못 할 도발이며 우리 군대의 장령에 대한 엄중한 명예훼손, 인격 모욕, 인권유린 행위"라고 헐뜯었음.
- 이어 "괴뢰패당이 극우 보수 언론들을 시켜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 군대 장령의 인격을 상상을 초월해 모독한 이상 그저 지나 보낼 수는 없다"며 사죄와 보상을 요구함.
- 북한은 지난 8일 박승원 상장이 현재 마식령 스키장에서 건설 사업을 지휘하고 있다며 남한에서 불거진 그의 탈북설을 부인했으며 남한 언론들과 국가정보원이 '북한 체제 불안정설'을 허위로 유포하는'정치적 모략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한바 있음.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이희호 여사 방북 때 항공기 제공 제안(7/12, 연합뉴스)

-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때 항공편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여사의 항공편 방북과 관련 "지난 6일 개성 실무접촉 때 북측은 이 여사의 방북 관련 항공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힘.
-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차 방북 때) 도로 사정이 안 좋아 힘들었다"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귀한 분이 오시는데 잘 오실 수 있도록 비행기로 모시라'라고 해서 북측이 항공편을 제안했고, 원하면 자신들이 비행기를 보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함.

- 남한의 '북한 정부성명(6.15) 수용거부 및 反北소동(북핵·인권문제 제기 및 금융제재 등)'을 주장하며 "現 남북관계의 파국적 상황은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힌 괴뢰패당의 본색은 추호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책임 전가(7.6,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인권백서 2015' 발간 관련 '악랄한 정치적 도발, 반민족적·반통일적 망동'이라고 지속 비난 속에 '참다운 인권보장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에 티끌만한 흠집도 낼 수 없다'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 중단' 촉구(7.7,평양방송)
- 제2연평해전 관련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이었다'는 억지 주장 속에 '괴뢰패당이 北의 도발, 승리의 해전으로 미화분식하며 광대극을 벌려놓고 있는 것은 최악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목적'이라고 비난(7.7,중앙통신·민주조선)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주한미군 사령관 업은 사진(7.2,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을 두고 "상전과 노예관계의 생동한 실례, 대미굴종 의식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조소(7.9,중앙통신)
- 유엔 북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와 대북금융제재 등을 거론하며 '남북선언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정당하고 그 이행이 중단된다면 앞으로 남북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차 '6.15·10.4선언' 이행 촉구(7.10,중앙통신·노동신문)
- 韓美행정협정 관련 '제국주의 상전과 식민지주구 사이에 맺어진 예속적인 협정, 현대판

노예문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화근'이라며 '행정협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 선동(7.10,중앙통신·노동신문)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7월 11일 '보안법' 및 최근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메르스사태 등 남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유린 왕초"라고 주장 '백서' 발표(7.11,중앙통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부산항 입항 미국 미시간호는 북침 핵전쟁 도발용"(7/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도발자들은 쓰디쓴 참패를 각오하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미시간호의 부산 입항은"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함께 북침 핵전쟁 도발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함.
- 신문은 이어"미국은 핵탄두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인 미시간호를 지상공격과 특수작전용으로 개조해 아태지역에 배치했다"면서"미시간호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 타격에 써먹으려는 미국의 흉심이 드러났다"고 풀이함.
- 또 미국이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7함대에 소속시켜 한반도 주변에 전진배치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가뜩이나 긴장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첨예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함.

■ **북한 "일본, 조선여성 20만명 성노예 만들어…반인륜 죄악"(7/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지성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일본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피해국들에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얼마전 일본 지식인들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일본 집권자들에게 보냈다"면서"그들은 솔직한 사죄와 명예

회복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설명함.

■ **북한, 공군 공중급유기 도입 비난…"전쟁범죄 행위"(7/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과연 유럽연합(EU)에 진정으로 이득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유럽 나라들이 공중급유기 4대를 남조선에 들이밀려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전쟁에 편승한 엄중한 전쟁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함.
- 논평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안은 위험한 '열점지역'이 된 것은 미국의 대대적인 무기 수출정책에 기인한다"며 미국이 남한을 무기 판매시장과 전시장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또 같은 날 '살인 악마들의 추악한 궤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이 탄저균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최근 주장을 반박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미국의 "일극세계화 책동은 실패했다"며 이는 "자주와 정의에로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세우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기 때문"이라며 '자주권 수호 및 反美·反帝 투쟁 승리' 주장(7.6,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7월 6일 말라위 대통령(아써 피터 무타리카)에게 '말라위 독립 51주년' 축전(7.6,중앙통신)
- 김영남, 7월 6일 코모로 대통령(이키릴로우 도이닌)에게 '코모로 독립 40주년' 축전(7.6,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7월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태복(의장)·안동춘(부의장)·태형철(北-베트남 친선의원단 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베트남 인민회의 대표단 위한 연회 개최(7.6,중앙통신)
- '美국무성, 2014년도 나라별 인권보고서' 발표 관련 '세계 최대의 인권후진국·인권말살국인 미국이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그 자체가 인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재차 미국의 인권실태를 비난 (7.7,중앙통신·민주조선)
- 몽골 대통령 특사(담빈 간호야그 외무성 국무비서)와 일행, 7월 8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7.8,중앙통신)
- 美 국무부 부장관 발언('미국은 비핵세계를 추구하지만 北의 지속적인 핵개발에 대처, 강력한 핵억제력 유지')에 대해 "오바마 정권도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만능론에 환장한 정권"이라고 비난 (7.9,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군기지 탄저균 반입사건 관련 '미국에 있어서 생화학전은 세계 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군사작전의 하나'라며 '우리의(北) 있지도 않는 생화학위협을 떠드는 것도 생화학전을 합법화하려는 속심이 깔려있다'고 비난(7.10,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美 흑인교회당에서의 백인청년 총기난사 사건을 거론 '세계 최악의 인간생지옥·인간증오사상과 무차별적인 살육만이 횡행하는 인권말살지대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며 '남의 인권문제를 걸고들 것이 아니라 제 처지에 대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비난(7.10,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연구원의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탄저균 생물무기 생산가능성 주장에 '지난 시기 그들이 떠벌여온 북의 생물무기위협설의 연장·확대로써 北에 대한 모략의 극치'라고 반박(7.11,중앙통신)
- 유럽(EU) 국가들의 '에어버스 A330 MRTT 공중급유기 4대 한국 판매'는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에 편승한 엄중한 전쟁범죄행위, 위험천만한 처사"라며 '전략무기 수출 중단' 주장(7.11,중앙통신)
- 北 군사대표단(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렴철성·방관복 육군 중장)-라오스 고위군사대표단('쌩누안 사이냐랏' 국방상 등)' 회담, 7월 11일 평양에서 진행(7.11,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軍 총정치국장), 7월 11일 라오스 고위군사대표단('쌩누안 사이냐랏' 국방상 등)과 담화(7.11,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6월 25일 '北-모잠비크 외교관계 설정' 40주년 즈음 외무 및 협조상(올데미로 발로이)에게 축전(7.11,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평양 채소과학연구소 시찰…"온실 너무 멋있다"(7/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남새(채소)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함.
- 더하여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아득하게 펼쳐진 연구소 온실들을 보며"정말 멋있다, 온실 바다를 보는 것만 같다"면서"규모가 클 뿐 아니라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자랑할만 한 기지"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함.
- 김정은 黨 제1비서는 지난 2012년 9월에도 이곳을 시찰한 바 있으며, 시찰에는 리재일 당 제1부부장과 조용원 당 부부장이 수행함.

■ **북한 김정은, 김일성 21주기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7/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김일성 주석 21주기인 8일 0시 인민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과 입상 앞에서 인사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 사진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오른쪽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조남진 중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순으로, 왼쪽에는 박영식 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노광철 상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순으로 도열함.

- 중앙통신은"참가자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높이 모시고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고 전함.

■ **북한 '여성영웅' 정춘실 사망…김정은, 조화 보내(7/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훈장 수훈자, 2중 노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 정춘실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9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셨다"고 보도함.
- 정춘실 소장은 상업관리소를 이끌며 능력을 인정받아 상업분야 종사자의 충성과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펼친'정춘실 운동'의 모델이 된 인물이며, 북한의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는 지난 2008년 정춘실 소장의 삶을 소재로 한 기록영화'인생의 시작도 끝도 한 모습으로'를 제작하기도 했음.

■ **북한 김정은, 김가공공장 현지지도…전일춘 동행(7/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재일·전일춘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이 수행했으며 특히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비자금 담당 기구인 노동당 39호실 실장으로 알려진 '김정은 금고지기' 전일춘이 지난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이후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냄.
- 김 黨 제1비서는 이번 현지지도에서 "김가공품 가지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공장에 찾아왔다"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관부문 양식사업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박영식 대장, 인민무력부장 임명 공식 확인(7/1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군사대표단과 라오스 고위군사대표단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참가자 가운데 한명인 박영식을 인민무력부장으로 소개함.

- 북한 매체가 박영식의 인민무력부장 임명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중앙통신은 지난달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관련 보도에서 수행 간부인 박영식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바로 다음에 호명해 그의 인민무력부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뉴스는 또 1999년 4월 인민군 소장으로 진급한 박영식은 2009년 4월 15일 군 중장으로 승진했으며 작년 4월에는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 오르며 상장으로 진급했고 현영철 숙청 이후인 지난달 29일에는 별 4개인 대장 계급을 달면서 초고속 승진을 한 바 있다고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지방선거 분위기 다잡기…"선거철마다 적들 와해공작"(7/10, 노동신문)**

- 북한은 10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동신문 1면 사설에서 "미제와 그 주총 세력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악랄해지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선거자들이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사소한 불건전한 현상도 예리하게 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적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공화국 정권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를 허물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우려함.

- 이어 “선거는 당의 영도 밑에 승승장구하는 공화국 정권의 불패성과 위력을 과시하고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방주권기관들을 공고히 다져나가는데서 전환적 계기”라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를 당부함.

- 김일성 사망(7.8) 21주기 즈음 청년학생들(만수대언덕, 최룡해 黨 비서 참석)·농업근로자들(황해남도 신천군 새길협동농장, 리명길 ‘농근맹’ 위원장 참석) 맹세모임, 7월 6일 각각 진행(7.6,중앙통신)
- 김일성은 ‘조선인민이 길이 받들어 모셔야 할 민족재생의 은인, 건국의 어버이시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영도자’라며 ‘그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 할 것’이라고 주장(7.8,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 父子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준공식, 함경남도 금야청년탄광과 장진임산사업소·운곡탄광·북청군 보천과수농장에서 각각 진행(7.10,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 포전담당제 보완책 마련…집단주의 장점 융합(7/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포전담당제가 실시되는 현실은 제한된 기술 역량만으로는 농작물 가꾸기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함.
- 신문은 포전담당제 도입 이후 문제점을 '농약치기' 작업을 예로 들며 설명하고,

분무기를 제대로 못다뤄 농약을 허비하거나 벼에 피해를 줬다며 지적했으나 황해도 안악군 대추협동농장이 올해 불리한 날씨 조건 속에서도 모내기를 7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등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미, 5월 교역액 10배 늘어…대부분 인도적 지원(7/8, 미국의소리)**

- 지난 5월 북한과 미국의 교역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북한과 미국의 교역액이 245만 달러로 4월의 26만7천 달러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히며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전함.

■ **38노스 "북한 정유공장 가동…중국, 원유 공급 중단 안한 듯" (7/10, 38노스)**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 '올소스 애널리시스' 선임분석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작년과 올해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정제하는 시설인 봉화화학공장이 정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버뮤데즈 분석관은 "이 공장의 철도 적하시설과 소정리 저장소, 백마리 철도역 등지에서는 유조화차가 이동하는 등의 활동이 목격됐다"며 "여기에 저장탱크 설립과 유지, 건물 증축 등의 건설 활동을 보면 공장이 정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버뮤데즈 분석관은 또 "자체적 원유조달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북한의 정유시설 인프라는 원시적인 수준"이라며 "현재 봉화화학공장이 북한 내에서 유일하게 유류제품을 만들고 저장할 수 있는 정유시설"이라고 소개함.

- 서해지구 수산사업소들, 상반기 수산물 생산계획 105% 달성(7.8,중앙통신)
-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 건설장의 청춘다리(길이 : 수백m, 넓이: 7m 이상 콘크리트) 건설공사 주력(7.6,중앙방송·노동신문)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북한, 간부들 탈북 속 해외 무역일꾼 소환설"(7/7,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 간부들의 탈북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외화벌이 일꾼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방송은 중국 대북소식통의 말을 인용해"6월 하순에 중국 선양(瀋陽)에 나와 있던 외화벌이 주재원 여러 명이 본국으로 급히 불려갔다"며"대상을 찍어 불러들인 것을 봐선 분명히 체포"라고 말했다고 전함.
- 더하여"이번 조치는 중국 베이징과 선양, 옌지(延吉) 등지에 나가 있는 당과 군 산하 외화벌이 지사들에 내려진 것으로, 국가보위부가 해외 주재 무역일꾼들을 대대적으로 실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평양, 자전거 전용도로 새단장…도심 전체로 확대"(7/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평양 시내 곳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스푸트니크방송을 인용해 8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북한이 최근 기존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노란색 타일을 까는 등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며"이와 같은 전용도로를 도심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는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것은 최근 평양 도심에 택시 등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북한, 제2 이통사업자 선정…고려링크 독점 깨져"(7/9, 노스코리아테크)**

-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노스코리아테크'는 9일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별'이라는 업체를 추가로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전했음.
- '별'은 그간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영 업체이며 기존 사업자인 고려링크가 북한 주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달리'별'은 북한 주민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 자유아시아방송(RFA)은"북한의 새 사업자 선정은 그동안 사실상 북한의 휴대전화 시장을 독점해온 해외합작법인 고려링크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전했음.

■ **중국제 짝퉁 '김일성·김정일 배지', 북한서 인기(7/10,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에서 제조된 짝퉁'김일성·김정일 배지'가 북한 시중에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모두 새겨진 이 배지의 중국산 모조품이 북한에 밀반입되면서 20만원(북한돈)하던'진품'배지를 밀어내고 4천원으로 폭락한 가격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휘파람' 부른 북한가수 "남녘동포와 통일노래 부르고파"(7/12, 통일신보)**

- 전혜영은 12일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와 가진 인터뷰에서"'휘파람'노래를

사랑해주고 저를 추억해주는 남녘 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그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앉아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말함.

- 전혜영은"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선발하여 훌륭히 키울 데 대한 조국의 고마운 교육 체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했다"며"꼭 훌륭한 가수 후배들을 키워내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통일신보는 전함.

■ **북한, 여름철 해수욕장 인기…룡수포해수욕장 소개(7/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7, 8월 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서해 명승 룡수포해수욕장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기고 있다"며 룡수포해수욕장을 소개하는 기사와 사진을 실음.
- 로용현 룡수포해수욕장관리소장은"예로부터'용 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포구라는 뜻에서 룡수포라고 불리는 이곳은 바닷물이 매우 맑다"며"용궁으로 통하는 큰 구멍에서 맑은 물이 항상 솟구쳐 오른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고 설명함.
- 신문은"근로자들이 해수욕을 하고 모래터 배구도 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 있다"며 "끊임없이 파도치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상쾌해지고, 해수욕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거뜬해져 사색의 실마리도 술술 풀린다"고 함.

- 국가우표발행국, '북한의 나라길시작점과 최고재판소 소개' 새 우표들(소형전지 1종·개별우표 1종) 창작(7.11,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특이사항 없음.

나. 미·북 관계

■ 미국 차기 합참의장, "북한 무기 확산시도 차단 강화"(7/11, 연합뉴스)

- 던포드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시도를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음.
- 던포드 지명자는 이를 위해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에 무기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연계 조직망을 색출하겠다"면서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음.
- 아울러 던포드 지명자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방어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남한과 협력해 북한 위협에 맞서 광범위한 억제와 방어, 대응 능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 · 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 · 미 관계

■ **미국 육군, 4만명 감축 계획…주한미군 영향 없을 듯(7/8, 연합뉴스)**

- 미국 USA투데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2017년 회계연도 말인 9월 30일까지 육군 병력의 규모는 현재 49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조정되고 군무원도 1만7천 명이 줄어들 예정임.
- 이와는 별도로 올해 10월부터 예정대로 시퀘스트레이션(자동 예산삭감)이 시행되면 육군은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줄여야 하며, 이 경우 육군은 42만 명까지 줄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임.
- 그러나 워싱턴DC 군사소식통은 "주한미군 병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포린폴리시는 주요 분쟁지에 대한 대규모 파병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현대전의 성격 때문에 감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으며, 지상군보다 첨단 전투기·군함, 무인기, 소규모 특수부대 등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정치인, 군사 전략가들의 견해가 힘을 얻었다고 보여짐.

■ **한미, '탄저균 배달사고' 민·관·군 합동실무단을 발족…과제 산적(7/12,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말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군 합동실무단을 발족시켰지만,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

- 한미 합동실무단은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단장을 맡고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포함하며, 법률과 미생물 분야 민간 전문가도 각각 1명씩 포함해 전문성뿐 아니라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음.
-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에 관한 미국의 독자적인 조사 결과는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미 합동실무단도 이 조사 결과를 참고할 예정임.
- 그동안 정부는 SOFA 합동위원회 차원의 핫라인을 설치하고 비상체제를 가동했지만 사고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아 국민적 불안과 의혹이 커졌으며, 한미 합동실무단의 활동이 '보툴리눔' 반입 의혹이나, 군산 및 평택 기지에도 반입 되었다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얼마만큼 해소할지 주목됨.

나. 한 · 중 관계

■ **軍, '중국에 구축함 정보 유출' 기무사 소령 구속기소(7/10, 연합뉴스)**

- 군 검찰은 기무사 소속 해군 S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음.
- 이 장교는 중국 연수 중 폭행 사건에 휘말려 중국 기관 요원으로 의심되는 인사와 관계를 맺게 됐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전달 책을 통해 해군 구축함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음.
- S 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구축함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주변국 동향과 군사 상황에 관해 분석한 군사자료 26건을 3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자료도 요청했으나 S 소령이 넘겨준 정황은 파악되지 않음.
- 군 검찰은 올해 2월에 S 소령에게 해군 기획참모부장 인수인계 자료를 넘겨준 B 대위도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임.

다. 한 · 일 관계

■ **일본 정부, "조선인 강제노동 인정 안했다…징용 불법 아니다"(7/6,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대 관방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메이지 산업혁

명 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토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음.

- 사토 대사는 등재 결정과 관련한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는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한국은 '강제 노역'으로 해석했지만, 일본은 일어판 번역문에서 원하지 않음에도 '일하게 됐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강제성'을 흐렸음.
-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청구권 문제나 강제동원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 주장을 펼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저에는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한국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깔렸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언론, "조선인 중노동 강요당한 역사 외면하면 안돼"(7/7, 연합뉴스)**

- 일본 언론들은 조선인 강제 징용 피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본의 징용 관련 발언을 한국이 식민지 피해 관련한 소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
- 마이니치 신문은 사설에서 "한반도 출신자가 이직(離職)의 자유없이 중노동을 강요당한 역사에 일본은 눈을 감아선 안 된다"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로 연결 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도쿄신문 역시 "전시에는 식민지로부터 (사람들이) 다수 동원돼 일본인과 함께 가혹한 노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썼지만 "한일 조약에서 (한일간 청구권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합의한 이상 한국 정부는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과는 분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 이에 비해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 정부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요구에 양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역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음.

■ **아사히 신문 사설, "한일 세계유산 최악은 피했다…앞으로 가자"(7/8, 연합뉴스)**

-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서 한일이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음.
- 아사히 신문은 '(세계유산 등록 관련) 합의에 기반해 앞으로 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긴 했지만 양측이 마지막에 서로 양보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양국이 "미래로 계승하는 세계유산의 정신 아래 이번 소동을 딛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적었음.
-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의 향후 사법 판단 등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강제 노동이 아니다'며 부정하지만 폭력적인 동원과 가혹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또한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항심을 부추기는 한국 언론을 의식해, 체통을 신경쓰지 않는 언동을 한 것이 눈에 띄었다"며 "구체적인 피해자 수를 도중에 사용하지 않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도 있었다"고 적었음.

■ **일본 내각관방참여, "한국의 세계유산 정치적 이용 분하다"(7/8, 연합뉴스)**

-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노역에 시달린 하시마 탄광 등 일본 산업 시설이 세계유산에 등록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가토 고코 일본 내각관방참여는 "한국이 세계유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일본이 허용하고 만 것은 안타깝고 분하다"고 말했음.
- 그는 외무성이 총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각국 대표단에 지인이 많았기 때문에 등재를 지지해달라고 다시 호소했다. 국가별 담당이 결정돼 있었고 한국은 외무성이 맡아 내 담당이 아니었다"며 자신이 한국과의 조정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밝혔음.
- 그는 이번에 등재된 세계유산이 "에도(江戶) 막부 시대 말기 사무라이들이 서양과학에 처음으로 도전해 불과 50년 만에 스스로 산업혁명을 담당하는 일꾼이 된 도정을 증언하는 유산"이라며 "오래된 꿈이 이뤄졌다"고 말했음.

■ **'조선인 강제노역' 이행 놓고 주미 韓·日대사 대리전(7/9, 연합뉴스)**

- 일본 산업혁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대응을 놓고 미국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대사들의 대화'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미 대사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음.

- 사사에 대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일간 합의를 통해 일본 문화유산을 등재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사소하다"고 주장했으며, "양국의 제안이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합의 하에 채택된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음.
- 그러자 안호영 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문안으로 나와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합의한 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음.
- 이날 두 대사는 아직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황임을 반영하듯 시종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으며, 두 대사는 또 북한 핵문제와 인권 등을 놓고는 거의 같은 견해를 보였음.

■ **아베 총리, "'강제노동 부정'에 韓정부 이의제기 없었다"(7/10,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 아베 총리는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때 일본 정부 대표 성명에 있었던 'forced to work(노동을 강요당했다)'라는 문구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징용된 경우도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음.
-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영문본이 정본"이라면서 영문본에 충실하면 "오해가 없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말했음.

■ **일한의원연맹회장, "일본, 식민지배·침략으로 韓中에 큰 고통"(7/10, 연합뉴스)**

-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한일·일한의원연맹의 합동총회에서 "일본은 과거 한때 확실히 식민지 지배나 침략 전쟁으로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의 국민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줬다"고 말했으며, 이는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내용 가운데 '사죄'에 관한 내용을 빼고 인용한 것임.
- 그는 조선통신사도 세계유산에 등록되도록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국회 일정을 이유로 행사장에 직접 오지 않은 아베 총리는 가토 관방 부장관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양국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밝힘.

- 양국 의원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동북아 외교·안보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이나 2018년 평창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일본 정부 핵심 인사의 강제 노동 부정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에 관해 양국 의원 간에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됨.
- 그러나 아베 총리가 불참하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등 주요 인사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일본 측에 빈자리가 많았음.

■ **일본 외무성, '강제노동 아니다' 주장 재외공관 통해 홍보(7/10, 연합뉴스)**

- 외무성은 세계 각국의 일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을 통해 '전시(戰時) 징용 정책은 국제법상 위법성을 수반하는 강제노동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홍보할 방침을 결정했음.
- 그러나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대외 홍보 전략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을 고조시키면서 세계 역사학자의 집단 성명 등으로 연결됐던 것처럼 '강제노동 부정'도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임.
- 자민당 국제정보검토위원회 등에 소속된 의원들은 이날 당내 회의에서 외무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밝힌데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으며, 일부 참석자는 "(한국 측과 타협해가면서까지) 세계유산에 등록할 의미가 있는가"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음.
-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또 '조선인 징용이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주장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방침도 확인했음.

■ **韓日의원, "70년담화에 무라야마담화 반영 노력"…징용문제 이견(7/10, 연합뉴스)**

-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의 전후 70년 담화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합의했음.
- 그러나 세계유산에 최근 등록된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조선인 노역의 성격에 관해 한국 의원은 강제노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뜻을 표명했으나 일본 의원은 징용령에 따라 한국인 뿐 아니라 일본인도 동원됐으며 이를 강제노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관련 내용이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못했음.

- 양측 의원연맹은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2018년 평창 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의 견실한 재정 운영,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 북한 핵·미사일·인권 문제 대응, 상대국 역사 교과서 번역 및 참고서로서의 활용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으며, 더불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음.

라. 한 · 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 · 중 관계

■ **국제법원, 남중국해 분쟁 심리 착수…중국측 "미국 음모"(7/7, 연합뉴스)**

- 환구시보는 필리핀 언론 등을 인용, 국제해양법재판소가 7~13일 첫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원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이번 중재 절차는 필리핀 정부가 지난해 3월 남중국해 분쟁도서에 대한 자국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공식 제출하면서 비롯됐음.
-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은 영유권 문제로 '유엔해양법공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필리핀은 "조업권과 같은 '해양권익'과 관련된다"고 반박하고 있음.
- 필리핀이 이번 재판을 제기한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 일부 해역과 해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은 9개의 선인 '남해구단선'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는 해석도 있음.

바. 미 · 일 관계

■ **미국, 일본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한일 합의 등재 환영(7/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일 양국 간 합의를 거쳐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시설을 등재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미국 국무부의 아·태지역 대변인 역할을 맡은 가브리엘 프라이스 공보국장은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역사적 장소들을 등재하기로 합의 결정(consensus decision)을 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 국무부는 그러나 등재 결정문에 우회적으로 반영된 강제노역의 해석을 놓고 한·일 양국이 논란을 빚는데는 언급하지 않았음.

■ **미국·일본, TPP 협상 재개…쌀·자동차부품 막판 쟁점(7/9, 연합뉴스)**

- 미국의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대행과 일본 TPP 정부대책본부의 오에 히로시 수석 협상관 대리가 협상에 나서 쌀과 자동차 부품 등 양국간 잔여 쟁점에 대한 절충점 찾기를 모색했음.
- 쟁점 가운데, 미국산 주식용 쌀의 무관세 수입 물량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17만 5천t 증가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5만t 증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산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도 관세 2.5%를 즉시 철폐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음.
- 양국은 이번 실무 협의에서 조율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8일 협상 참가국 전체 각료회의 개최 시점에 맞춰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와 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상 간의 각료급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음.

■ **일본 자위대, 미국·호주 연합훈련에 첫 참가…섬 탈환작전 공개(7/12, 연합뉴스)**

- 일본 자위대가 미국과 호주가 실시하는 정례 군사 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에 처음으로 참가, 훈련했음.
- 이달 5일 시작해 21일까지 예정된 '탈리스만 세이버'는 호주와 미국이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연합 훈련으로, 양측에서 약 3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이며, 일본 자위대는 이 훈련에 처음으로 대원 약 40명을 파견했음.
- 애초 육상자위대 측은 탈리스만 세이버에서 미군과 훈련할 뿐 호주군과는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일본·호주의 3국 연합 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의 보도에 의하면 훈련은 호주군도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음.
- 미국·일본·호주 측은 이번 훈련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음.

사. 미·러 관계

■ **러시아 핵폭격기, 미국 서부해안 위협 비행(7/7, 연합뉴스)**

- 미국 폭스뉴스는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 2대가 4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께 알래스카 인근 해안에 접근해 미 공군 F-22 전투기 2대가 긴급 출격했다고 전했음.
- 이로부터 약 30분 뒤 또다시 Tu-95 1대가 캘리포니아주 인근 해안에 출현해 미 공군 F-15 전투기 2대가 대응 출격했음.
- Tu-95는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이나 이날 폭격기들이 무기를 싣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폭스 뉴스는 Tu-95가 미국 서부 해안을 비행하는 바로 그 시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독립기념일을 축하했다고 꼬집었음.

■ **미국 차기 합참의장, "러시아 최대 안보위협…中·北·IS도 위협"(7/10, 연합뉴스)**

- 미국의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조지프 던포드 해병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의 핵보유, 크림반도 강제합병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 침입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가장 실질적인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러시아를 지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 던포드 지명자는 그 다음으로 중국, 북한, '이슬람국가(IS)'를 순서대로 거론했으며, 북한의 위협과 관해 "잠재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탄 미사일 능력"을 언급했음.
- 던포드 지명자는 중국과 관련해선 군사력이나 태평양지역에서 위상 등의 측면에서 "중국을 러시아 다음으로 2번째에 놓겠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꼭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음.
- 그는 "태평양 내 미국의 이익과 관련해 중국의 능력을 본다면 위협이라기보다는 '안보상 우려' 국가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음.

아. 중 · 일 관계

■ **중국, "日 강제노역 인정 주목…이웃국 신뢰 얻어야"(7/6,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일부 유적에서 강제노역이 이뤄진 사실과 일본 정부가 제2차대전 기간 징용노동 정책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강제노동 정책의 피해자들을 기리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힘.
- 그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등재결정문에 모두 반영했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아시아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 장슈친 유네스코 주재 중국 대사는 독일 본 현지에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일본 침략에 의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장 대사는 "중국은 일본이 노동자의 강제징용 사실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신청을 추진하는데 반대해 왔고 일본 측에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일본 대표단의 강제노동 인정에 관한 발언에 주목한다고 말했음.

■ **중국, 7·7사변 기념일…'전방위' 대일 역사공세(7/7, 연합뉴스)**

-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를 무대로 '일제 만행' 알리기에 나서는 등 대일 역사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7·7사변(노구교 사건)' 78주년 기념일인 이날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는 '위대한 승리, 역사적 공헌'을 주제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7·7사변 78주년을 기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행사가 진행돼 열기를 고조시켰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전했음.
- 중국 당국은 오는 8~9월 전 세계 150여개국과 유엔 본부 등에서 '평화를 위한 기념'을 주제로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항일전쟁과 2차대전 승리, 유엔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개최하며, 일본군 전범들이 스스로 범죄를 고백한 자백서도 출판될 예정임.
- 중국은 올해 만주사변이 터진 9월 18일, 대만 광복 70주년인 10월 25일, 난징대학살이 일어난 12월 13일 등 각종 항일전쟁 기념일에도 대대적인 활동을 할 방침이어서

올해는 연말까지 일본을 향한 '역사 총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日 말장난, 국제사회 비웃음 살 것"(7/7,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모두 강제징용과 강제노역이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과 식민통치 시기에 저지른 엄중한 죄행이란 점을 알고 있다"면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역사는 왜곡할 수 없다"고 밝혔음.
- 화 대변인은 "이런 원칙적인 중요한 문제를 두고 말장난을 하는 것은 덧칠을 하면 할수록 더 검어지고 국제사회의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이 역사문제에서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는 것을 거듭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음.
- 그는 이어 "우리는 일본이 책임있는 태도로 역사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실제 행동을 통해 아시아 이웃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것을 요구했음.

■ **주일 중국대사, "폭거를 반성하지 않는 자, 잘못을 반복한다"(7/7, 연합뉴스)**

-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는 항일 전쟁이 전면화한 계기가 된 '7·7사변' 78주년을 맞은 이날 "일본이 전후 70년을 계기로 침략의 역사를 진지하게 총괄하고 미래를 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청 대사는 이날 도쿄의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7·7사변 기념식에서 "폭거를 반성하지 않는자는 잘못을 반복한다"며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고 이같이 언급했음.
- 청 대사는 "전후에 관계 회복은 어려운 길을 거쳐왔다. 그 정치적 기반은 일본이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전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 **"일왕면책이 日우경화 초래"…中관영출판사 항일전쟁사 펴내(7/8,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출판사가 일왕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이 일본 우경화로 연결됐다는 분석을 담은 책을 펴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음.
- 인민출판사가 지난 5월 출판한 '중국 항일전쟁사'는 태평양 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해 "비교적 공정했지만 결함이 분명히 있다"며 "히로히토 일왕은 일본 침략 전쟁과 일본군의 잔학 행위에 대해 최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히로히토 일왕에 대한 '면책'이 일본의 우경화와 같은 일련의 결과를 가져왔고,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가 석방돼 총리직에 오른 일 등을 거론하며 "전범을 감싸고 죄를 용서한 것이 군국주의 사고의 부활에 온상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음.

■ **7·7사변 기념일에 日, "술먹기 좋은 날"…中 '발칵'(7/9, 연합뉴스)**

- 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7일 오후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또다시 1년 중 가장 맥주 마시기 좋은 날이 왔다"며 맥주 축제 풍경 등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일본의 칠월칠석 행사 소식을 전했음.
- 중국언론들은 "중국정부는 7일에 7·7사변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했지만 주중 일본대사관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당일 오후 공식웨이보를 통해 올린 글이 이런 내용이었다며 황당해했음.
- 그러나 이 글을 접한 중국의 언론과 누리꾼들은 강한 분노를 터트렸고 "공공연한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대사관의 사과를 요구했음.
- 일부 중국언론은 이번 논란을 7·7사변에 빗대 '칠석사변'이라고 명명했고, 주중 일본대사관은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했음.

■ **시진핑 주석, "역사망각은 배반…왜곡에 단호히 반대해야"(7/10,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7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역사를 망각하는 것은 배반을 의미한다"며 과거사 문제에서의 브릭스(BRICS) 국가 간의 공조를 촉구했음.
- 시 주석은 또 "역사를 거울로 삼아 냉전적 사유를 버리고 '제로섬 게임'을 거부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제재나 위협보다는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함.
- 그는 테러리즘과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동반자 관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으로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하는 '다원적 문명의 동반자 관계',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동반자 관계'등 4개의 동반자 관계를 제시한 뒤 IMF 운영에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IMF의 지배구조를 개혁에 브릭스 국가들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음.

■ **시진핑 주석, "누구를 막론하고 역사왜곡 행위 절대 허용 못한다"(7/11,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일본의 '과거사 역주행'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음.

- 그는 전날 열린 제7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역사를 망각하는 것은 배반을 의미한다"고 밝힌 데 이어 SCO 회의에서도 과거사를 부정·미화하는 일본을 향해 거듭 경고장을 보낸 것임.
- 시 주석은 연설에서 지역의 운명공동체 구축, 지역의 안보 장벽(보호막) 구축, 실질적 협력 내실화, 선린우호 관계 강화, 개방을 통한 SCO의 발전 추구 등 5대 분야의 제안을 했음.
- 또한 그는 "SCO가 테러리즘과 마약 퇴치, 국방분야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안보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 자신의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도 강하게 표명했음.

■ **시진핑 주석, 9월 열병식에 아베 총리 초청 확인(7/11, 연합뉴스)**

- 청궈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우파 방문에 관한 설명회에서 "시 주석이 이미 아베 총리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말했다고 관영 중국일보가 보도했음.
-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은 이미 모든 관련국 지도자들과 국제조직에 초청장을 보냈다"며 아베 총리도 초청했음을 시사해 왔으나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자가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아베 총리가 실제로 열병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전망이 있음.

■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중일 갈등 씨앗으로 부상(7/12, 연합뉴스)**

- 중국이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이유로 시설물을 만드는 것에 일본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양국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달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2013년 6월 이후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가스전 채굴 관련 시설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반복해 항의하고 작업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간의 대응을 설명했음.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관한 일본의 항의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며 작업 중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음.
- 이 문제는 그간 물밑에서 논의되다가 최근 표면화하는 양상이며,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이 해상 플랫폼에 레이더를 설치하거나 이를 정찰용 헬기의 이착륙 거점

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음.

자. 중·러 관계

■ **중·러 주도 상하이협력기구, 몸집 불려…파키스탄·인도 가입(7/7, 연합뉴스)**

- 환구시보에 따르면 청궈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파키스탄과 인도가 이번 SCO 정상회담에서 SCO 가입절차를 시작한다며 두 나라의 SCO 가입은 SCO의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파키스탄 현지언론 등은 SCO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SCO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두 나라의 가입이 이 기구의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할 뿐 아니라 양국 관계에도 건설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인도의 경제시보 등 현지언론은 세계최대 에너지 소비국 가운데 하나인 인도가 SCO가입을 통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스리랑카와 아르메니아는 현재 옵서버 지위를 신청한 상태임.

■ **중국-러시아-인도 '삼각동맹'강화…브릭스서 서방견제(7/9,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인도, 중국-러시아, 인도-러시아 간의 전략적 동맹강화를 논의, 각종 외교현안과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해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음.
- 그는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라는 다자기구 틀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으며, 유엔의 '포스트(Post) 2015' 개발 목표, 기후변화 협상, IMF개혁, 반(反)테러 등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중러간 긴밀한 협력을 주문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자고 말했음.
- 시 주석은 또 다른 주요 대국인 인도 모디 총리와 회담에서 고위층 왕래와 전략적 소통 강화,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자며, 양국이 AIIB, 브릭스 신개발은행,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BCIM)를 잇는 경제회랑 개발, '일대일로' 등 전략적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을 심화시키자고 제안했음.
- 두 정상은 또한 양국간 최대 갈등 현안인 국경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음.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WFD "북 농아 2%만 농아학교 다녀"(7/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내 취학 대상 농아 중 약 2%만이 청각장애자를 위한 농아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미국의 AP통신이 8일 보도했음.
- 이 통신은 국제농아인연맹(WFD)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여타 개발도상국의 경우 취학 대상 농아가 농아학교에 재학하는 비율이 10-20% 정도 된다고 전했음.
- 하지만 북한 당국자는 취학 대상 농아가 북한에 약 6천 명 있고 그 중 절반 정도가 농아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주장했음.
- 북한에는 약 30만 명의 청각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평양에는 농아학교가 한 곳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8곳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국제농아인연맹은 지난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7차 '국제농아모임'이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구호단체 '투게더-함흥' 주최로 오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음.

■ 북한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입후보 전면 배격"(7/9, 미국의소리)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지난달 30일자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한 데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음.
- 자성남 대사는 이 서한에서 한국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한 것은 무분별한 정치적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음.
- 한국은 진정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심이 없으며, 이사국으로서 지금까지 한 일은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는 세력의 돌격대 역할 뿐이라는 것임.
- 자 대사는 또 한국이 입후보 의사를 공표한 문서에서 밝힌 그동안의 업적과 앞으로의 공약들은 수치스런 자체 인권기록을 감추기 위한 빈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음.
- 특히 한국이 이사국에 선출되면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대결적인 공약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 자 대사는 북한은 한국이 이사국에 입후보한 것을 전면 배격한다면서,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인권 분야에서의 정치화와 대결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입후보를 배격할 것을 요청했음.
- 자성남 대사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 6월 23일 발표한 성명을 서한에 첨부해, 오는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 회람해 달라고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음.
-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7일자로 유엔대표부가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음.
- 한국은 지난 2006년에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이어 2008년 재선에 성공해 2011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음.
- 이어 지난 2012년 선거에서 다시 이사국으로 선출돼 2013년부터 활동을 재개했고, 올해 말 3년 임기 마감을 앞두고 다시 재선에 도전한 것임.
- 북한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이사국에 입후보하지 않았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12년 연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음.

■ **"북한 가뭄 계속되면 어린이들 생명 위험"…유니세프 경고(7/9, 뉴시스)**

- 유엔국제아동기금(UNICEF)은 8일 앞으로 북한의 심각한 가뭄이 더 계속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북한의 강수량, 인권단체들로부터 전해지는 정보, 북한 당국의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 일부는 이미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음.
-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는 현재 가장 극심한 가뭄 피해 지역으로 알려졌음.
- 유니세프는 최근 북한 보건 당국과 면담을 통해서 이 지역에 어린이 이질이 늘고 있으며 이는 비가 오지 않아서 안전한 식수원 공급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최근 가장 심한 피해 지역에 정수용 알약, 절수용 저수용기, 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치료용 건강 식품 등을 보냈으며 극심한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태로운 어린이들을 구조하는 훈련도 돕고 있지만 더 많은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음.

■ **"김정은 집권 후 70여 명 처형"(7/9,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서울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김정은 시대의 공포정치를 김정일 시대와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음.
-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 행정부장을 처형하는 등 김정은식 공포정치의 강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을 뿐 아니라 처형 빈도도 현격히 높아졌다는 것임.
- 김정은식 공포정치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측 일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윤 장관은 평가했음.
- 공포정치에 두려움을 느낀 북측 일꾼 중에는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임.
- 이 같은 현상이 정권 붕괴 전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병세 장관은 "정부에서는 붕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면서 "과거보다 북한의 정세가 안보와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음.
- 남측 언론의 잇따른 '북한 인사 망명' 보도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조금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면서 "특정 사안들의 경우에는 좀 틀린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음.
- 대표적인 사례는 인민군 장성 망명설로, 일부 남측 언론은 최근 북측 인민군 상장이 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보도했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한 장성 망명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음.
- 그러나 특정 사례가 오보일 수는 있지만, 북측 고위급 인사 망명과 관련한 남측 언론의 최근 보도가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음.
-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북측 노동당 간부의 탈북 사실을 밝히면서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그 배경으로 설명한 바 있음.

■ **FAO '북한, 7월부터 식량배급량 25% 줄여'(7/10, 미국의소리)**

- 북한 당국이 이달 초부터 주민 1인 당 하루 식량 배급량을 310g으로 줄였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음.
-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북한 당국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410g씩 배급했던 식량을 이달 초부터 310g으로 줄였다고 말했음.

- 코슬렛 담당관은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해 북한이 배급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가뭄으로 밀과 보리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26%, 감자는 24% 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임.
- 앞서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 국가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올해 초만 해도 이모작 작물의 수확량을 전년도의 36만 6천t에 비해 18% 줄어든 30만 1천t으로 예상했지만, 가뭄의 영향으로 이보다 2만 4천t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음.
- 코슬렛 담당관은 이모작 농사가 북한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9월까지 춘궁기 중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식량 상황을 우려했음.
- 통상 6월~7월 배급량이 390g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식량 사정이 굉장히 나쁘다는 설명임.
- 또 북한이 대체로 8월과 9월에 식량 배급을 줄였는데, 올해는 7월부터 줄인 것도 식량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음.
- 코슬렛 담당관은 모내기철인 4월 중순부터 6월 말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며, 올 가을 농사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가뭄 피해가 큰 황해남북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개용 장비와 구황 작물 종자, 비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음.
- 또 가뭄 대처 방안 등 기술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코슬렛 담당관은 북한이 올해 최악의 식량난을 겪지 않으려면 외부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음.
- 식량농업기구가 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북한이 확보한 곡물은 6만 8천t으로, 올해 10월까지 필요한 곡물 43만 1천t의 16%에 불과함.

2. 북한인권

■ **정부 "北, 실질적 인권개선 위해 노력해야"(7/6, 연합뉴스)**

- 정부는 6일 북한이 통일연구원 발간 북한인권백서를 '극악무도한 도발'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남쪽에 대해 비방할 것이 아니고 북쪽의 인권문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음.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북한이 2000년 이후 공개처형한 주민이 1천382명이라는 북한인권백서 내용에 대해 "인권 모략 소동은 총포 소동에 못지않은 극악무도한 도발이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비난했음.
- 정 대변인은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노력을 다해 석방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계속 노력은 진행하고 있고, 북한의 반응은 아직은 변화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물론 우리는 이희호 여사 방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다"고 말했음.

■ **영-독 탈북자단체, 북한 인권운동에 힘 모은다(7/7, 연합뉴스)**

- 최근 창립한 독일 탈북자 단체 '독일탈북자협회(DVNF)'가 영국의 유럽북한인권협회 (EAHRNK)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 독일탈북자협회는 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독일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정착과 단합을 돕기 위해 2일 슈투트가르트 난민촌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앞으로 북한 인권운동과 한반도 통일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독일탈북자협회는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 운동을 목표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지난달 창립했으며 독일의 첫 탈북자 단체로 알려졌음.
- 유럽북한인권협회의 빌리 데이비스 전략담당은 "탈북자 정착 지원 연구나 활동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우리 단체가 추진하는 탈북자 증언 기록 프로젝트에 독일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음.

- 그는 "올해 가을 네 가지 탈북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먼저 영국에서 시작하겠지만 독일이 다음 목표"라고 덧붙였음.
-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영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는 600여 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음.
- 독일의 탈북 난민은 100명 정도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음.

■ **국제인권단체 "북한 김정은 국제법정에 세워야"(7/8, 연합뉴스)**

- 국제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법정에 세워 3대째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음.
-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김일성 21주기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김일성 주석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사망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음.
- 로버트슨 부국장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면죄부를 받지 않고 응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김 주석 사망일을 맞아 국제사회가 기억해야 할 유산"이라며 "김씨 일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HRW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김 주석과 같은 수법으로 독재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비밀 경찰, 수용소,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지도자 숭배, 공포심을 자아내기 위한 공개 처형 등이 김정은 통치하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음.
-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의 강력한 비난을 북한 정권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며 "유엔이 계속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미·한·일 대사 "북한인권 관심 이어나갈 것"(7/9, 미국의소리)**

-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대사들의 대화' 토론회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음.
- 성 김 대표는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국들과 함께 노력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현재의 긍정적인 추진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음.

- 성 김 대표는 또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관련해 계속해서 증거와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고 말했음.
- 사사에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파악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미국, 한국, 일본과 역내 국가들은 핵과 미사일 문제뿐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의미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음.
- 사사에 대사는 이어 미-한-일 세 나라가 협력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이 이뤄지도록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이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음.
- 한국의 안호영 주미 대사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데 공감했음.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충분히 높아졌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단계로 쉽게 발전할 것이란 설명임.
- 안 대사는 특히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최근 개소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음.
-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의미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성 김 대표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성 김 대표는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을 내기 위한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3. 탈북자

■ 특이동향 없음.

4. 이산가족

■ 청와대, 이산가족 6만명 생사 확인 행정지원 검토(7/10, 아이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이산가족 상봉신청자 6만여 명의 생사 확인을 위해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음.
- 박 대통령은 10일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발언했음.
- 박 대통령은 이날 '남북간 실질협력 통로 확충'을 논의한 2세션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활용하는 방안과 이미 상봉한 가족들이 선물이나 서신을 교환해 생전에 가족에 대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음.
- 개성공단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박 대통령은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개성공단 설명회 개최 등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개성공단에서의 모자보건사업, 탁아소 증축 등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1세션인 '한반도 정세변화와 통일준비의 지평 확대'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3통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대북 투자자들의 북한 내 사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북 협력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북미 5월 교역 급증, 대부분 인도적 지원(7/7,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5월 북한과 미국의 교역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상무부는 최근, 지난 5월 북한과 미국의 교역액은 245만 달러로 4월의 26만 7천 달러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음.
- 4월과 5월 교역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는 반면 전액 북한으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음.
- 특히 통계상 수출로 분류되었지만, 전체의 96% 정도는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 목적으로 제공한 인도적 지원품목인 것으로 드러났음.
-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은 292만 8천 달러로 이 가운데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 274만 7천 달러로 전체의 93.8%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닭·오리 등 가금류 5만 6천 달러, 그리고 설탕 1만 6천 달러 등이었음.

■ "대북 식량 지원에 2천만 달러 필요"(7/7, 자유아시아방송)

- 2013년 7월부터 2년 시한으로 진행되던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6개월 더 연장됐음.
- 세계식량계획은 7일 국가사업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여성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사업'을 위해 약 2천173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난 2년 모금이 목표액의 55% 정도로 저조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음.
- 이 사업에 가장 크게 기부한 국가들은 스위스, 유엔, 한국,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이 기구는 밝혔음.
- 특히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초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관련국들 간의 정치적인 대화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지원 사업) 모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초 재정난으로 콩과 식물성 기름을 제공하지 못해, 원래 계획된 식량 배급의 약 32%만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음.

- 이 기구는 또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북한의 14개 공장에서 다양한 영양 요소를 함유하고, 소화가 잘되는 '영양강화식품'이 제조될 것이라고 밝혔음.
- 세계식량계획의 식량 지원 사업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약 177만 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제기구 "북 가뭄 피해지역에 구호품"(7/9,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은 9일 최근 북한 내 가뭄 피해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 설사병 사례가 급증했으며 이는 안전한 식수의 부족과 위생의 악화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 이 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의 경우 올해 상반기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71-140%나 늘었으며 함경남도의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음.
- 유엔아동기금은 이어 이러한 심각한 피해 상황은 유엔 합동 조사단과 북한 당국 자체의 피해 상황 평가를 합친 것이라고 밝혔음.
- 유엔아동기금은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수제와 영양보충제 등 미리 비축해 두었던 구호 용품을 분배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음.
- 한편 국제적십자사도 "북한이 100년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수인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 의약품이 태부족이라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음.
- 이 기구도 유엔 합동조사단과 북한 당국과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의 가뭄 피해 지역에서의 곡물 생산량이 30-40%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음.
- 특히 국제적십자사는 "계속 (피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후, 긴급 구호 지원과 장기 지원을 위해 대북 지원 사업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것이라면서, 식수와 위생 시설을 제공하고, 야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온실(그린 하우스)을 제공하고 산림 농업 사업 등도 펼치겠다"고 말했음.
- 또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에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황해남북도와 강원도를 최대 물 부족 지역으로 지적했음.
- 이들 지역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평균 강우량이 75%가 감소했다는 설명임.
- 이 기구는 따라서 현재 북한 주민의 2/3가 배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뭄으로 인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덧붙였음.
- 국제적십자사는 특히 가뭄으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피해는 5살 미만의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의 수인성 질병의 증가라고 말했음.
- 이 기구는 이어 이런 취약 계층들이 평소 위생과 관련한 생활 습관(practice)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 가뭄으로 깨끗한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긴급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 **유니세프, 북 유아에 의료용품 지원(7/10,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은 북한 내 가뭄 피해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 설사병 사례가 급증했고 안전한 식수의 부족과 위생이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이 지원 계획을 발표했음.
- 유엔아동기금은 이어, 2012년과 비교해 올해 강우량이 약 75% 감소하는 등 황해북도가 가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음.
- 유엔아동기금은 또, 설사병이 가장 만연한 지역은 황해남도로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를 비교하면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설사병이 140% 증가했다고 북한 보건성을 인용해 전했음.
- 이 기구는 또, 황해북도 지역에서는 총 경작지의 약 58%를 차지하는 1만 6천 871 헥타르가 훼손됐으며, 황해남도에서는 총 경작지의 약 80%를 차지하는 8만 5천 892 헥타르가 손상됐다고 전했음.
- 이에 따라 유엔아동기금은 최대 피해 지역인 황해북도의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8. 북한동향

■ **'北 인권백서 2015' 발간 관련 '악랄한 정치적 도발, 반민족적·반통일적 망동'이라고 지속 비난 속에 '참다운 인권보장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에 티끌만한 흠집도 낼 수 없다'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 중단' 촉구(7.7,평양방송/대결정신병자들의 단말마적 발악, 중앙방송/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른 체제대결 광기)**

■ **'美국무성, 2014년도 나라별 인권보고서' 발표 관련 '세계 최대의 인권후진국·인권말살국인 미국이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그 자체가 인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재차 미국의 인권실태를 비난(7.7,중앙통신·민주조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